밤바다 불 켜지자 일자리·숙박업소·식당이 늘어났다

‘여수 관광객 1500만 시대’ 배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박람회때 갖춘 SOC 역할
청년 창업 7% 이상 늘어
市 관광정책 시민 중심 전환

지난해 연간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여수시는 올해 관광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커진 관광 시장과 관광 활성화의 혜택이 전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관광정책’과 원도심 중심의 관광 거점을 전 도시로 확대하는 관광콘텐츠 확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과 여수 앞 바다 365개 섬의 체류형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4차례 여수를 찾는 크루즈선을 통해 크루주 관광도 훈풍이 기대된다.

◇잘 갖춰진 SOC 덕 ‘톡톡’=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잘 갖춰진 도로와 철도 등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관광객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수로 통하는 도로의 경우 편도 1차선인데다, 여수산단을 드나드는 대형 트레일러 등으로 사고 위험도 높았다. 하지만,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갖춰졌고, 여수 엑스포역 신설로 전라선 KTX 등의 운행이 이뤄지면서 관광객들의 여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만의 문화관광콘텐츠도 인기=여수 관광의 중심에는 ‘여수 밤바다’가 꼽힌다. 가수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여수 밤바다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여기에 여수시가 낭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더해가면서 관광객들을 유혹했다. 이 가운데 ‘낭만버스킹’ ‘낭만버스’ ‘낭만포차’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종포 해양공원 등에서 진행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23만여명이 관람했다. 전년 2016년(17만명)에 비해 35%가 늘었다. 여수 낭만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탑승 인원은 1535명으로, 평균 탑승률 98%를 기록했다. 따라서 여수시는 낭만버스를 올해부터 확대 개편 운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지역 경기 침체로 그동안 불이 꺼졌던 여수밤바다와 옛 도심에 불이 켜지면서 지역경제도 되살아나고 있다. 여수시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가 2016년보다 7.3% 증가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관광 활성화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여수지역 식품위생업소는 8391곳, 공중위생업소는 1832곳으로 2016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723곳, 167곳이 늘었다.

특히 관광숙박업소의 경우 62곳에서 108곳으로 74%가 늘었고, 민박 역시 457곳에서 507곳으로 9%가 증가했다. 지난해 10월까지 ‘신규영업허가·등록·신고’는 2016년보다 249건이 많은 2494건이 접수됐다.

◇여수시, 관광정책 ‘시민중심’으로 전환=관광객 급증에 따라 그동안 교통체증과 불법 주차 등으로 여수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따라서 시는 올해 관광시장의 양적 증가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돌산·여문공원과 수산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이고, 민선 6기 내 총 30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웅천에서 소호 간 해상교량을 개설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시민을 위한 음식·숙박업소 시민할인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수 관광지도 ‘재편’ 나서=현재 여수관광은 낭만콘텐츠와 해양관광이 이뤄지는 원도심과 돌산반도가 중심이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 등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수시는 관광객 분산을 위한 ‘새로운 관광 거점 확대’에 나선다. 화양반도에 대규모 체험형 관광시설 투자유치를 통해 돌산과 웅천~화양반도로 관광벨트를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시에 포함된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활용해 내륙관광 중심에서 섬을 중심으로 한 생태탐방 관광 시장으로도 넓혀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금오도 비렁길의 경우 지난해 40만8000명이 찾는 등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여수 박람회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MB 반발-文 분노…검찰 수사 급물살 탈 듯

MB측 ‘노무현 파일’ 거론
개헌·권력기관 개편 차질 우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분노한다’는 표현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현 정권 간의 충돌로 비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과 함께 올 상반기 정국을 관통, ‘6·13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가 강력한 비판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넘어 ‘노무현 정부 파일’까지 거론하며 총반격의 모양새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했고,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왜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일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정권을 옥죄는 적폐청산에 대해 ‘보수궤멸’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실제로 내용의 진위나 파괴력을 떠나 ‘노무현 정부 파일’을 폭로할 경우 이번 갈등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정국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양측의 이 같은 전면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당장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개헌·사법개혁 특위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월 임시국회까지 연말과 비슷한 파행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2부속실에 전달돼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 전 실장이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로 환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게 줬고, 그것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논두렁 시계’ 되갚기라며 반발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신들이 과거에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참고 참았던 언행 ‘도 넘었다’ 판단
취임 이후 첫 수사사건 의견 표명

文대통령 MB 발언 반박 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성명을 정면 반박한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주장한데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있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명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0자 가량의 두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초고강도의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노 코멘트”라며 직접 대응을 삼가는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모양새를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정면 반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는 검찰 수사에 항변하는 차원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끄집어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뜻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참고 봐왔던’ 이 전 대통령의 언행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에는 검찰 수사를 친구이자 운명적 관계인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계한 데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불쾌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는 참기 힘든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9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로 몰아가려 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분노’라는 단어를 이용해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를 말했다”며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이날 입장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인 것처럼 규정한 발언은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이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분노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로서는 다만 문 대통령의 언급이 마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또 전·현 정권이 직접 충돌하는 모양새도 국민통합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이 전 대통령 측과 확실하게 각을 세움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성향의 지지층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